

진곡산단 쓰레기 몸살...관리 책임은 '나몰라라'

공터 곳곳 풀 무성하고 쓰레기 뒤덮여...주민들 "관리 부실로 장사 망쳐" 조성주체 광주도시공사·관리주체 연구개발특구재단 "법적 의무 없어" 1명 뿐인 환경미화원 관리 어려운데 잇단 민원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광주시 광산구 진곡일반산업단지(진곡산단) 공터 곳곳에 불법 쓰레기가 넘쳐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년전 산단 모든 부지가 분양됐지만 상가 등 입주 기업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에 빈 상가로 방치되면서 인근 공터가 불법 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진곡산단 조성 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단)이 서로 법적의무가 없다며 관리 책임을 미루며 '핑퐁'만 하고 있는 탓에 약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27일 재단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진곡산단(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고통동, 오선동 일원)은 지난 2011년 조성에 들어가 지난 2019년 모든 부지가 분양됐다.

진곡산단은 총 389필지(면적 190만8000㎡)에 산업시설용지(224필지), 지원시설용지(74필지), 단독주택용지(76필지), 화물공용차고지(1필지), 생산물류시설용지(9필지), 도시가스(1필지)와 전기공급설비(4필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진곡산단 입주업체들 사이에 아직 입점하지 않은 공터가 있고, 인근 주민들은 이 공터에 버려진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건축 폐기물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으로 주변 식당 및 커피점·편의점 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4일 찾은 오선동 일대 진곡산단은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듯 무성한 풀과 쓰레기로 뒤덮여있었다.

버려진 컵라면 통에선 전남 내린 비와 섞인 오물이 고여있어 악취가 풍겨왔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매트리스와 의자 등 대형 폐기물도 많다는 것이다.

봉투에 가득 담긴 담배꽂초, 버려진 안전보장구와 깨진 유리병까지 있어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었다. 사람 키만큼 자란 건조와 거칠게 뻗어 있는 나뭇가지들로 인해 흡사 쓰레기 매립지 같았다.

이 공터 부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야 하는 용지로, 최근에는 차다 못한 인근 상가 주민이 광산구청에 민원을 넣어 소유자에게 '사유지 청결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진곡산단 내 민원은 총 30건으로 이중 쓰레기 투기가 10건, 사유지 청결명령은 6건으로 전화 민원이나 재단 측으로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청결명령 이후에도 벌금(30만원) 부과만 진행될 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반복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라석균(60)씨는 "은 갓 쓰레기와 야생 풀 등으로 인근에 별레가 들끓고 야생 쥐들이 보온재까지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서려고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손님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와 관리주체인 재단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분양후 1년 이상 미입주시 분양된 토지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환수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 두 기관의 설명이다.



시민들이 27일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진곡일반산업단지에서 쓰레기로 뒤덮인 공터 옆을 지나가고 있다.

또 진곡산단 내 산업시설과 생산물류시설 용지의 분양·입주 관리의 재단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광주도시공사가 분양해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

재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원시설 용지까지 관리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고 도시공사는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관리는 소유자가 맡는 것"이라며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빈 공간 방치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할 근거법이나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공실률

이나 부지 관리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단 측은 "폐기물이나 악취, 소음, 진동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며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답변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광산구 환경미화원 91명 중 진곡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한명으로, 혼자서 산단 관리와 소유지 관리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광주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진곡산단에 다른 인원까지 투입해 치우다보면 분명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으로써는 소유자가 본인 공장이나 가게 앞을 잘 치우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차도 누워 있던 태국여성 알고 보니 마약에 취해서 광주·전남 마약사범 잇단 검거

광주와 전남에서 마약 사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청은 27일 태국인 A(여·30대)씨와 한국인 B(30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제2순환도로 입구 인근에서 마약에 취해 차도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 투약 정황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와 같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두명 모두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거하며 해외 익명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를 들어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해남경찰청은 불법체류 태국인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께 해남군 화산면 김양식장 내 숙소에서 합성마약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김양식장에서 숙식하며 일하다가 마약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나, 마약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구매 경로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5·18재단 "전두환 손자 광주 사죄 방문 일정 조율"

공법 3단계와 긴급회의 열고 전우원씨 입장 수용하기로 결정 마약 혐의 조사에 일정 늦어질수도

할아버지인 전두환의 학살행위를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겠다는 전우원(27)씨<광주일보 3월 27일자 6면>가 5·18기념재단과 광주행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전씨가 SNS 메시지를 통해 연락해와 귀국 후 바로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으로 향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측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로 재단의 SNS 메시지를 통해 "저의 잘못

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 드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 도와달라"고 보냈다.

전씨의 글을 확인한 재단은 27일 오전 11시께 5·18민주화운동 유족회 등 공법 3단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전씨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께 전씨에게 재단 관계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전달하고 한국 입국 이후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전씨는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5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광주 5·18기념재단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상황 진행되는 거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면서 "부족하고 너무나 큰 죄인인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재단 측은 "27일 오후 5시 현재 전씨가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비행기 탑승 전까지 지속적인 연락은 진행했지만, 아직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고 밝혔다.

전씨가 예정대로 광주를 찾아 사죄할 경우 5·18 학살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씨 직계가족 중에서는 첫 사죄 사례가 된다.

다만 전씨가 입국 즉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광주행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경찰은 내사단계이며 추후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전씨의 광주행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목디스크 수술 중 사망...마취제 부작용 판단

광주경찰 "의료사고 아냐"...불송치

경찰이 지난해 20대 여성이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깨어나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여성 사건 관련 입건자 7명 모두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시 서구에 있는 A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의료사고라며 고소했고 경찰은 A병원 측 의사 3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지난해 연말 두 기관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은 이송중 과실 책임이 있는 지 여부까지 판단한 결과 신속한 이송이 이뤄진 만큼 병원측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2월 A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후 장 천공이 발견돼 입원 치료중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 사고와 관련해 의사 3명을 입건해 수사중으로, 한국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감정서가 오는 데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A병원은 지난해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송치(기소 의견)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